

#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서민들...대안은 없나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대부업체들마저 대출문을 조이면서 저신용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 5478명과 우수 대부업체 2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가운데 최소 3만9000명,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추정치인 3만7000~5만6000명보다 1만5000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도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추정돼 전년도 추정치인 6400억~9700억원 대비 최대 2600억원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들이 늘어난 것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저신용자 가운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8%로 전년도와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했다. 응

###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대부업체 대출 급감에 최대 7만명 불법사금융 유입

### '시장 연동형 금리상한제' 주장 있지만 여론 부담·국회 반대 등 못넘어

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0%는 불법사금융을 통해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에 달했다. 심지어 이자가 연 1200%를 초과한다는 응답도 10%가 넘었다.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대부업권이 지난해부터 신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영향이다. 2021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인 가운데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하자 대부업권에서는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올해 1분기 신규대출은 2052억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1.9%나 급감했다.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은 지난해 1분기 1조1344억원, 2분기 1조2079억원에서 3분기 9189억원, 4분기 3709억원 등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대부업체 대출 신규이용자 수도 올해 1분기 2만6767명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0.6% 줄었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마저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요건 완화와 골자로 한 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경우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함으로써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업체를 통한 저신용자 대출절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기준 24%에서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서민금융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에 묶인 법정최고 금리로 대부업체 마저 대출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시장 연동형 금리상한제는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최고금리 상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지표에 맞춰 그에 맞춰 법정 최고금리가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전락 우려가 점증하면서 한때 이를 검토했지만 여론 부담과 국회 반대 등으로 실제 추진에 나서지는 않았다. 당장 국회에는 최고금리를 현행보다도 더 낮은 12~15% 수준까지 낮추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부작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빚 못갚아 한계 내몰린 차주들...가계신용 '빨간불'

### 금융권 연체율 상승세...개인회생·채무조정도 늘어 서민 대출문턱 높아질 듯...한계상황 악순환 우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급격하게 불어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신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빚 갚지 못한 차주가 이자나 개인회생 대신 이자 및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최후수단인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올해 1분기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4만 6067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대비 43.9%나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15.9% 늘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최장 10년(담보 35년)의 기간 동안 빚을 갚아나가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한 신청자는 2020년 12만8754명, 2021년 12만7147명 등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3만8344명으로 늘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2분기 3만2662명, 3분기 3만3943명, 4분기 3만9734명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약 9000~1만1000명 수준을 기록하다가 11월 1만 4579명으로 신청자가 크게 뛰 후 12월 1만3367명, 올해 1월 1만3225명, 2월 1만 5275명, 3월 1만7567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의 개인회생도 최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수는 1만1228건으로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나 증가했다. 개인회생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1만489건) 이후 처음이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진 차주들을 위한 것으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까지의 매달 7000건대를 기록했지만 11월부터 신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되는데 올해 1~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달한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늘었다는 것은 벗어나기 힘든 연체의 늪에 빠진 차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0%)은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하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64%)도 전월말 대비 0.09%포인트 늘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5%와 10%를 넘어섰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5.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5%대를 넘어선 것은 2016년(5.8%) 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 3.4%였던 연체율이 올 들어 1.7%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도 올해 1분기 79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5.1%를 기록해 지난해 말 대비 1.7%포인트 늘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신한·삼성·국민·하나·우리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사들도 1분기 연체율이 1%대를 넘어섰다.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장구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 연체율도 최근 두 자릿수에 도달했다. 올해 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은 10%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6.5%) 대비 3.5%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도 1.3%포인트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의 신용위험도는 카드 사태가 있던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4개 금융기관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대

출이 있는 가계에 대해 전망한 신용위험도는 1분기 39에서 2분기 42로 높아졌다. 이는 2003년 4분기에 44를 기록한 후 19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문이 좁아질 경우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가계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분기 국내은행의 대출대도지수는 가계주택대출은 14, 가계일반대출은 6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8포인트, 5포인트씩 줄었다.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대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플러스(+)면 그 반대이다. 은행권의 경우 아직은 가계대출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추세는 확연히 꺾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정책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취약계층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채무조정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b>최정현</b> 편집국장 <b>직무대리 서선욱</b>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b>서율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 (062) 222-2580</b>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